

人文論叢

82권 3호

2025년 8월

서평



# 식민지 토목관료 연구의 디딤돌

고태우\*

[서평] 広瀬貞三(2023), 『朝鮮總督府の土木官僚：植民地支配の社会基盤整備者』, 東京：明石書店, 231쪽

## 1. 히로세 테이조 교수를 추모하며

2012년 2월 15일이었다. 역사문제연구소와 후쿠오카대학이 주최한 “근대 조선의 정치와 사회”라는 주제의 학술교류회가 후쿠오카대학에서 열렸다. 양쪽 기관 이름은 형식상의 명명이었고, 한국과 일본의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가 작은 발표회를 가졌다. 한국 쪽에서는 김종식, 전병무, 장신, 이형식, 정준영, 이현희 선생님과 필자가, 일본 쪽에서는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시모노세키시립대학), 히로세 테이조(広瀬貞三, 후쿠오카대학),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당시 사가대학 소속. 현 규슈대학), 고바야시 도모코(小林知子, 후쿠오카교육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일본 쪽에서는 기무라 겐지, 나가시마 히로키 교수, 한국 쪽에서는 이형식, 이현희 선생님이 발표했다. 정준영, 장신 선생님이 각각 기무라, 나가시마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히로세 테이조, 고바야시 도모코 교수가 각각 이현희, 이형식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히로세 테이조 선생님(이하 존칭 생략)을 처음 뵈었다.

당시 박사과정이었다던 필자는 1930년대 이뤄진 공민구제토목사업에 관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그림 1] 학술교류회에서 토론하는 히로세 테이조 교수(2012년 2월 15일 필자 촬영)

한 석사논문을 작성한 직후여서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의 토목을 연구하는 히로세 테이조 교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이었다. 교류회 장소에서 히로세 교수에게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드리고, 뒤풀이에서 히로세 교수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화라기보다는 히로세 교수께 일방적으로 배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뒤 히로세 교수의 많은 논문을 읽으며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목사업과 정책, 토목관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다.

히로세 테이조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 토목사 연구에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1980년 한국으로 유학을 온 뒤 그는 1984년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19세기 말 일본의 조선 광산 이권 획득 기도(1882-1894)」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일본의 여러 대학 강사를 거쳐 니가타국제정보대학과 후쿠오카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고려대 석사논문에서 보듯이 그의 첫 연구는 일본 세력의 한국 광산 이권 침탈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이용익(李容翊)의 정치활동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뒤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토목사업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다. 수풍발전소 건설과 1910년대 도로 건설, 치수사업, 조선에서의 '관 알선'과 토건노동자, 그리고 일본

내 토목사업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강제동원 사례 연구, 각종 건설사업에서의 토지수용령 문제 등이 그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앞에서 예시한 토목 연구와 함께 조선총독부 토목관료의 실태에 주목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사학자 이청원(李清源)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최근에는 사도광산 등에서의 강제동원 문제, 식민지기 국립공원 관련 주제에 천착했다.<sup>1</sup>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의 연구의 큰 줄기는 역시 식민지 조선의 토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10월이었다. SNS를 통해 그가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1년에 후쿠오카대학에서 정년을 맞이했던 그가 불과 1년여 사이에 그리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고 충격이었다. 히로세 교수와의 인연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논문을 보며 식민지 토목의 가닥을 잡았던 필자로서도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일본의 조선사학계에서 추모 분위기가 일었고, 후쿠오카대학 교원들과 히로세 교수와 인연이 깊었던 메이지학원대학의 아키즈키 노조미(秋月望)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저서 간행위원회(故 広瀬貞三著作刊行委員会)가 발족되었다. 이듬해 9월 히로세 교수의 단독 저서가 마침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그가 남긴 원고 파일이 발견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sup>2</sup> 그 책이 바로 『조선총독부의 토목관료』이다.

## 2. 조선총독부 토목관료 연구의 일단락

『조선총독부의 토목관료』는 히로세 교수가 발표한 그간의 논문을 집대성한 저서이다. 서장, 종장과 함께 본론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장 다음에는 간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아키즈키 노조미 교수의 후기와 히로

1 広瀬貞三(2023), 『朝鮮総督府の土木官僚: 植民地支配の社会基盤整備者』, 東京: 明石書店, pp. 213~231의 후기와 약력·저작 목록 참조.

2 広瀬貞三(2023), p. 216.

세 테이조 교수 약력·저작 목록이 딸려 있다. 본론은 조선총독부 토목기구 변천과 관료의 통계적 현황을 살펴본 제1장, 개별 토목관료의 활동과 그들의 사회·공사 인식을 검토한 제2~4장, 하급 직원으로서 고원(雇員)과 용인(傭人)을 다룬 제5장, 그리고 1945년 이후 토목관료의 활동을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나눠 추적한 제6장으로 이뤄져 있다.

히로세 교수는 서장에서 조선총독부가 조선 지배를 위해 행했던 각종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한 토목관료에 주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들을 해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총독부가 조선에서 행한 토목사업의 실태와 특질을 해명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토목관료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하여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토목관료의 범위와 실태를 명확히 한다. 둘째, 토목관료의 직위마다 일본인과 조선인 민족 비율을 밝히면서 조선인이 어느 정도까지 직위 상승이 가능했었는지를 밝힌다. 셋째, 토목관료 개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들이 어떻게 토목공사에 종사했는지를 검토한다. 넷째, 1945년 8월 이후 각 토목관료가 일본과 남북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추적한다. 본론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조선총독부 토목기구의 변천을 개관하고,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직위별 토목관료의 실태를 분석했다. 저자는 토목기구 변천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했다. 제1기(1910~1919년)는 통감부 때 나뉘어 설립된 토목 관련 부서를 관방 토목국으로 일원화한 시기이다. 제2기(1919~1924년)는 총독관방 토목부가 만들어지고 기술관료 출신 토목부장이 부임하면서 토목행정이 진전된 시기이다. 제3기(1924~29년)는 1924년 건축재정으로 토목부가 폐지되고 내무국으로 토목부서가 축소된 시기이다. 제4기(1929~45년)는 1929년 건축과가 폐지되고 토목과가 남은 채 이후 시기까지 토목부서가 하나의 과로 유지된 시기이다.

이어서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토대로 토목 관련 기관에 소속된 관료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토목 부서의 역대 장관·국

장·부장 17명, 과장 12명, 토목출장소장 38명 모두 일본인이었다. 기사(技師) 162명 가운데 다수는 도쿄제국대학을 위시한 제국대학 출신이 많았으며 조선인은 5명뿐이었고, 기수(技手) 가운데도 조선인은 극히 소수였다. 기수급 가운데는 경성고등공업학교(이하 경성고공) 출신이 많은 점이 특징이었다. 한편, 토목관료는 총독부에서 각지 토목출장소, 각 도청으로 이동했고, 다시 총독부로 이동하는 등 중앙과 지방 관서를 옮기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장부터는 조선총독부에 재직했던 주요 토목관료를 조명하고 있다. 2장은 전국의 토목출장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경성출장소의 소장을 오랫동안 지내고, 사후에 회상록도 편찬된 혼마 도쿠오(本間德雄)에 관한 연구이다. 혼마 도쿠오는 도쿄제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18년 동안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며 대동교와 한강교를 설계하는 등 교량공사의 제1인자로 평가된다. 저자에 따르면, 그는 조선 토목계에서 제3위 정도의 지위를 가졌으나 더 승진할 기회를 얻지 못하리라 판단하고 만주국으로 넘어갔다. 그는 만주국 국도국 제1·2공무과장, 수력전기건설국장, 만주토목학회 회장, 만주전업(滿洲電業) 부이사장을 역임하며 만주 토목계의 중진이 되었다. 만주국 관료로서는 풍만(豊満)발전소 건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일본의 토목기술력을 보여준 사례이면서도 다수의 중국인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이기도 했다. 패전 후 국민당 정부에 억류되면서 자원위원회 고문이 되기도 했고, 일본으로 귀환한 뒤에는 일본개발기술협회 이사장, 개발건설턴트 사장 등을 지내며, 계속 토목사업에 종사했다. 저자는 혼마 도쿠오를 조선과 만주, 중국, 일본 모두에서 활동하며 조선 및 만주에서의 대규모 토목기술을 일본으로 환류한 인물로 평가했다.

3장은 토목사무관 사카모토 가이치(坂本嘉一)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중등교육 수준의 교육(대만총독부 국어학교 사범부 졸업)을 받고 제국대학 출신이 아님에도 고원부터 서기, 속관(屬官)을 거쳐 고등관인 토목사무관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러일전쟁 때 조선에 머무르게 되어 운송업, 소

학교 교원이 되었다가, 통감부 삼정국(參政局) 감시(監視), 총독부 전매국 감시를 거쳐 1913년부터 1939년까지 대부분의 관직 생활을 토목과에서 보냈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각종 토목법 제정에 관여하면서 1920~30년대 총독부 내 토목법의 제1인자로 평가받는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 조선하천령, 시가지계획령, 조선도로령 제정에 관여했고, 『조선토목행정법』 등 토목법에 관한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는 하천령 제정 과정에서 하천을 국유로 설정했고, 토지수용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는데, 이는 총독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토목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민간과 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것이었다.

4장에서 저자는 여러 자료가 남아 있는 관료 가운데 중요성이 있는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 토목국장, 신바 고헤이(榛葉孝平) 토목과장, 혼마 다카요시(本間孝義), 나가사토 에이지(長郷衛二) 기사의 조선왕조 또는 일본이 추진한 토목공사와 조선 사회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다. 이들 인식의 공통점은 조선시대 토목공사의 수준을 매우 낮게 보고 일본의 조선 토목공사는 높게 평가한 점, 스스로 실시한 토목공사가 조선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도가 담긴 인식이다.<sup>3</sup>

저자는 ‘비(非)관리직원’으로서 임시직인 고원(雇員)과 용인(傭人)에 관해서도 서술했다. 5장은 총독부 내무국 토목출장소에서 작성한 공사 보고서인 ‘공사지’(工事誌)에 기재된 명부에서 고원과 용인을 분석한 것이다. 그는 한강개수공사와 대동강개수공사를 수행한 각 출장소 직원과 인원수를 살펴보고, 고원의 학력과 경력, 용인의 직위 등의 실태에 접근하고자 했다.

3 토목관료의 조선 사회, 조선 개발에 관한 인식은 이미 평자도 연구한 바 있으며[고태우 (2015), 「조선총독부 토목행정과 토목관료의 ‘조선개발’ 인식」,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히로세 교수도 평자의 연구를 인용했다. 히로세의 연구는 개별 인물의 저서와 자료를 더욱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들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사례의 분석에 따르면, 고원은 압도적으로 일본인이 많았다. 최종 학력을 알 수 있는 고원 가운데는 대학 출신자 일부와 함께 경성고공 출신자가 많았던 점이 특징이었다. 고원의 승진과 관련해서도 일본인이 승진 기회를 독점하고 있었다. 용인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데, 담당 직책상 공부(工夫)와 공장고(工場雇)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 장에서는 하급 토목관리 양성기관으로 경성공학원(京城工學院, 1926년 설립)과 경성공업학교(京城工業學校, 1922년 설립, 시초는 1899년 설립된 관립상공학교)를 주목한 점도 새로운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끝으로 6장에서 저자는 1945년 이후 토목관료의 활동을 추적했다. 먼저 일본인 관료는 일본으로 귀환한 뒤 일부는 내무성 토목국 등 관청에 소속되어 경력을 이어가기도 했지만, 건설업 회사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조선에서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담당할 기회를 얻지는 못하여, 전후 일본 사회에서 크게 사회적으로 상승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소수의 조선인 관료는 해방 후 남한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다. 총독부 토목과와 철도국의 기사·기수 출신들이 대한토목학회의 임원이 되었고, 식민지기 일본 대학 출신자들이 서울대 공학부의 교수진이 되는 등 한국 토목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대개 1970년대 이후에는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이들은 퇴장하고 미국식 교육을 받은 세대가 남한 토목계의 주역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에 제국대학 출신자들이 기용되었으나, 적어도 토목 분야에서는 총독부 관료 출신이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기관에 항일 경력이나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던 이들이 기용되었기에 총독부 출신자들이 중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sup>4</sup>

4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식민지기에 경력이 있었던 이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는 점에서, 해방 직후 북한 지역에서 토목 분야의 식민지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토목 등 기술 분야에서 소련으로의 유학생 파견이 1946년 일찍부터 진행된 점은 히로세 테이조가 언급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 이외에 소련 유학이라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張超(2023), 「북한의 공업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1945~197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조선총독부 토목관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최초의 저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총독부 토목행정기구의 변천부터 직위별 관료의 숫자와 그 시기별 추이, 국장과 부장, 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인물들부터 가장 말단에 있던 고원과 용인까지 시선을 두고 있다. 또한, 1945년 이후 토목관료들이 일본과 남북한 등 각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까지 파악하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집 자료이다. 조선총독부 직원록과 관보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부터 1945년 이후 전후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토목 관련 관청 및 협회 잡지, 공사 보고서, 인명록, 주요 관료와 그 후손의 회고록 등 다양한 사료를 섭렵하여 내용을 서술했다. 이 책의 장별 주석에는 다른 연구자들도 후속 연구를 위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오랫동안 히로세 교수가 토목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결과이다.

넓은 시야와 자료 구사를 통해 본 연구는 식민지 관료, 특히 기술관료에 관한 이해의 폭을 더하였다. 토목 분야에서 기술관료들은 사무관료에 비하여 토목 관련 부서의 최고 직위로 승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기술관료 출신으로는 하라 시즈오(原静雄)만이 총독관방 토목부의 토목부장으로 서 토목 행정기구의 최고직에 있었을 따름이다. 이와 함께 최고 직위에 승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목관료들은 기술적인 기사(技師)가 된 뒤에는 더 이상의 직위로 상승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기사로서 토목출장소 소장이 된 뒤 토목과장 등의 직위로 오르지 않고서는 더 높은 직책을 차지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과장직에 있던 사무관료가 도청의 부장 또는 도지사, 총독부 국장으로의 승진 기회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기술관료들의 승진길은 막혀 있었다.

한편으로 고원과 용인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식민지 조선을 대상으로

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책의 성과가 소중하다. 일찍이 오카모토 마키코가 1930년대 후반 이후 고원의 민족별 숫자에서 조선인의 증가와 역전을 지적한 바 있었고, 철도국 등을 비롯한 일부 현업노동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다.<sup>5</sup> 그럼에도 이 책에서처럼 고원과 용인 개인의 학력을 비롯한 이력까지 연구를 시도한 것은 최근에 보기 어려웠다. 토목 분야 고원의 학력에서 경성공공 출신자의 중요도를 지적한 점, 하급 토목관리 양성기관으로 경성공학원과 경성공업학교를 거론한 점도 향후 후속 연구에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저자도 언급했듯이 조선인 고원이 많이 있었던 체신관서, 철도국, 세무관서, 전매국 등과 비교하고 종합하며 하급 직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책은 첫째, 저자 개인으로는 조선총독부 토목관료에 관한 그간 본인의 연구를 총집결한 것이다. 둘째, 학계 차원에서는 식민지 토목관료에 관한 연구의 가장 포괄적인 버전이고, 기술관료 차원에서 식민지 조선관료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식민지 통치, 식민지 관료 연구에서 한 번은 검토하고 가야 할 저서인 것이다.

### 3. 의문과 과제

식민지 토목관료 연구의 디딤돌이 될 이 책이지만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무엇보다 이 글은 토목관료의 변동과 개별 인물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는 충실하지만, 식민지 토목관료, 기술관료를 다루는 것의 의미 부여는 유보적이다. 실증에 치중한 나머지 히로세 교수의 사론(史論)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서장에서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토목사업에 대한 패전

5 岡本真希子(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 朝鮮・台湾総督府と帝国日本』, 東京: 三元社. 이 밖에 고원, 용인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広瀬貞三(2023), p. 152 및 pp. 179-180 참조.

직후 일본에서의 평가와 남한의 대한토목학회가 내린 평가가 각기 다른 점을 주목했지만,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관료의 경력과 행위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물론 그는 주요 직위로의 승진 기회와 직급별 비율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민족별 격차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조선과 만주에서의 대규모 공사에서 조선인·중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고, 일본인 토목관료들이 토목사업을 통해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렇지만 기존의 식민지기 연구에서도 언급된 지배의 정당화, 민족 차별이라는 것 외에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토목관료에 관한 평가를 더욱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목행정 기구의 변천을 파악하는 작업을 넘어 정책과의 연동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히로세 교수는 토목기구의 변천을 네 시기(1910~19년/1919~24년/1924~29년/1929~45년)로 구분했는데, 토목정책과 연관해서 본다면 다른 시기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평자는 저자와 달리 토목정책과 연결할 때,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 1930년대는 1910년대 철도와 도로, 항만에 집중된 경향에서 벗어나 치수, 전력개발 사업 등이 추진된 점에서 '토목사업의 다각화' 시기로 명명한 바 있다. 저자는 행정기구 차원에서 1929~45년을 한 시기로 묶었다. 이와 달리 평자는 1940년대 토목행정 부서(토목과)가 내무국 산하에서 사정국, 그리고 이후 광공국 산하로 위치되는 점, 1940년대 들어서는 일제의 행정 간소화 방침 속에서 총독부 부서가 통합되고 토목행정 기구도 축소되는 점, 토목과(또는 건설과)에 전시 토목건축업에 대한 통제 업무가 부가되고, 일제 말기에는 토목사업의 확장보다는 광공국 동원과 단위에서 전쟁 수행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1940년대를 '토목 부서의 축소와 전시(戰時)토목'의 시기로 규정한 바 있다. 사정국과 광공국 시기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별도의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sup>6</sup> 물론 식민지기 조선 토목정책의 전반적인 시기 구분과 특징은 내무계통의 토목만이 아니라 철도와 통신, 전력 등 전체

를 아우르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히로세 교수가 시도한 직위와 민족별 인적 통계, 학력과 승진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은 중요하지만, 토목관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는 부족하다. 관료의 인식과 행위가 그들이 터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더욱 밀착된 접근이 요구된다. 토목관료의 경우 조선토목연구회(1941년부터 조선토목회)와 같은 관변 조직을 설립하여 토목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식민지 조선의 토건업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토목건축협회, 경성토목건축업협회에도 일정하게 관여하면서, 토목청부업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 개발을 둘러싸고 총독부와 토건업자가 길항하면서도, 식민국가와 자본, 업자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개발동맹’이 형성되기도 하였다.<sup>7</sup> 한편으로 토목관료들은 퇴임 후 국책회사나 대기업 간부, 민간회사 등으로 옮겨 자신의 관직 경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노력하기도 했다.<sup>8</sup> 이처럼 조선총독부 주변의 관변단체, 조직과 자본과의 유착관계, 퇴직 후 경력 등에 천착할 때, 관료가 식민지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정책을 통해 나타난 개발의 실체와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6장에서 다룬 1945년 이후 토목관료의 역할, 나아가 식민 유산에 관한 의문이다. 1945년 이후 토목관료의 행적을 다룬 것은 공간적으로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까지 시선을 두고 있는 점에

6 고태우(2015), pp. 275-299.

7 식민지 개발을 피치배민 입장에서는 강압과 희생을 동반한 개발로 보면서, ‘국가-기업(업자) 개발동맹’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조명한 연구로는 고태우(2019), 「일제하 토건업계와 식민지 개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고. 이 밖에 조선총독부 광무관료의 역할을 살피면서 관료와 관변단체의 결성에 주목한 연구로는 長沢一恵(2009), 「朝鮮總督府・鈺務官僚と朝鮮鈺業會：兩大戰間期における鈺業保護奨励策を中心に」,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 編), 京都: 思文閣出版 참고.

8 관료의 퇴임 후 경력과 관련하여 미나미 총독기 병참기지정책 과정에서 개발 관련 위원회의 ‘낙하산’ 인사(‘天降組’)에 주목한 연구는 방기중(2007),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인식과 병참기지 강화 정책」, 『東方學志』 13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참고.

서, 일본과 남북한 등 각지에서 토목관료의 영향력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점에서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토목관료의 영향을 인적 연결성을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식민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너무 단선적인 이해에 그칠 우려가 있다. 식민지기에 활동한 이들이 1945년 이후 각지 사회에서 언제까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인적 유산 차원에서만 조명할 필요는 없다. 식민지기 관료들이 남긴 제도와 법령, 건설업 분야의 기술 및 문화, 토목 교육 등에도 주목한다면, 식민지 토목 및 토목관료가 끼친 영향력, 나아가 식민지 유산 문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몇몇 군데 오류가 보이는 점은 옥에 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쪽, 22쪽, 47쪽에서 저자는 하라 시즈오가 1923년 12월까지 토목부장에 재임하고, 1923년 12월부터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내무국장이 토목부장을 겸임한 것이라 서술했으나 오류이다. 하라 시즈오는 일본제국 차원의 행정 정리로 조선총독부 토목부가 폐지되는 시점(1924년 12월 25일)을 앞둔 1924년 12월 2일에 총독부를 사직했다. 오쓰카 쓰네사부로 내무국장이 토목부장을 겸무한 것은 12월 15일부로, 하라 시즈오의 토목부장 사직에 따른 공백을 메우며 토목부 폐지까지 열흘 정도 겸무한 것에 불과하다.<sup>10</sup> 또한, 18쪽, 22쪽에서는 건축과장직이 1926년 6월에 없어지고 토목과에 통합

9 예컨대 1911년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토지수용령」은 군정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구 법령 정리 과정에서 1962년 1월 폐지되고 「토지수용법」이 제정되었다. 토지수용령은 해방 후 남한에서 1950년대 내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토지수용법 제정 이후에도 토지수용에 관한 관련 중심, 국가 중심의 강압성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이러한 제도와 문화, 권력의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이에 관한 시론적인 발표는 고태우(2022), 「식민지 개발법령의 해방 후 유산 문제: 토지수용 관련 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연구·교육 역량강화 사업단 주최,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글로벌 발전사 워크숍(2022. 12. 16.)』 참고.

10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大正 제3696호, 1924.12.8.;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大正 제3708호, 1924. 12. 22.; 「朝鮮總督府訓令 제36호」, 『朝鮮總督府官報』호외, 1924. 12. 25.

된다거나(18쪽), 내무국 건축과장 이와이 나가사부로(岩井長三郎)의 건축과장 임기를 1929년 6월까지로 기재했는데, 오기이다. 내무국 건축과는 조선 총독부훈령 제53호로 1929년 11월 8일에 폐지되고 건축과 업무가 총독관방 회계과로 이관되었다. 이때 건축과장직도 사라졌고, 이와이는 당일 총독관방 회계과 근무를 명받았지만, 11월 27일에 총독부를 사직했다.<sup>11</sup> 18쪽과 206쪽 등에 기재된 광공무국 또는 광무국은 광공국(鑛工局)이 정식 명칭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이상으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향후 과제를 거론해 보고자 한다. 히로세 교수는 종장 말미에서 스스로 남은 연구 과제를 언급해 놓았다. 첫째, 총독부와 각지 출장소, 각 도청으로 이동한 토목관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 둘째, 도청 단위에서의 토목관료 분석, 셋째, 조선인 비관리직원(고원, 용인)의 출신 학교 밝히기, 넷째, 전매국과 체신국, 철도국 등 다른 현업부문과 토목 분야 관료의 비교 등이 그것이다. 모두 향후 과제로서 타당한 지적이다. 여기에 평자가 조금 더 보태자면, 다섯째, 토목관료를 식민지 관료 연구로 더욱 넓혀서 일본제국 영역 전체, 곧 일본, 타이완, 한국, 만주 등지를 아우르는 관료 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과 공부성(工部省) 등 일본 관료제도와 기구의 형성 및 발달이 식민지 기술관료의 탄생과 운영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관료 연구에서 본국과 식민지의 비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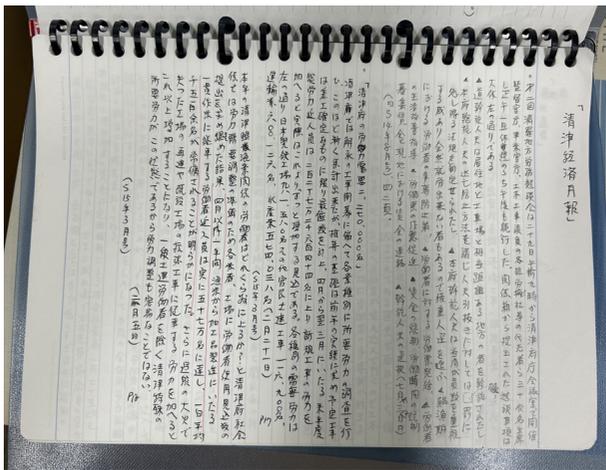
#### 4. 후기

2024년 6월이었다. 리쓰메이칸대학 안자코 유카(庵途由香) 교수로부터

11 「朝鮮總督府訓令 제53호」, 『朝鮮總督府官報』 호외, 1929.11.8.;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호외, 1929. 11. 8.;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昭和 제875호, 1929. 12. 2.



[그림 2] 히로세 교수가 수집한 자료의 일부(2024년 11월 25일 필자 촬영,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그림 3] 『청진경제월보』 내용을 기록한 히로세 교수의 노트(2024년 11월 25일 필자 촬영,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히로세 교수가 평생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같은 대학 국제평화박물관 자료로 정리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금 뒤늦게 2024년 11월 25일에 평자

는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안자코 유카 교수의 안내로 히로세 교수의 여러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아직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서지사항을 작성하는 중이었다.

히로세 교수가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실물로 마주했다. 자료를 정성스럽게 필기한 노트를 보면서 그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전달되는 듯했다(그림 3). 수집은 했지만 잘 열어 보지도 않았을 법한 봉합된 서간과 사진첩을 보면서, 생전이라면 그가 앞으로 연구했을 주제들도 어렵פות이 기늠해 볼 수 있었다. 그의 자료가 박물관에 잘 정리되어 평자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의 눈과 손에 닿기를 바랐다. 비록 선생은 너무 일찍 생을 마감했지만, 후학들이 남은 과제들을 잘 갈무리해 더 좋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선생으로부터 배운 지난날을 기억하며 선생의 평안을 기원한다.

## 참고문헌

### 자료

『朝鮮總督府官報』

### 논저

고태우(2015), 「조선총독부 토목행정과 토목관료의 ‘조선개발’ 인식」,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고태우(2019), 「일제하 토건연계와 식민지 개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민족문제연구소(2017), 『일제식민통치기구사건: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민연주식회사.

방기중(2007),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인식과 병참기지 강화 정책」, 『東方學志』 13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張超(2023), 「북한의 공업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1945~197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岡本真希子(2008), 『殖民地官僚の政治史: 朝鮮·台湾總督府と帝国日本』, 東京: 三元社.

長沢一恵(2009), 「朝鮮総督府・鉱務官僚と朝鮮鉱業会: 両大戦間期における鉱業保護奨励策を中心に」,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 編), 京都: 思文閣出版.